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대학 졸업장 없이는 취업도 어려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미래는 어둡다. 여섯 명 중 한 명만이 풀타임(full-time)으로 일하고 있다. 다섯 명 중 세 명은 그들의 부모 또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젊은 세대 가운데 상당수인 73%는 더 나은 직업을 위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년 내에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계획을 가진 사람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위에서 언급한 젊은 세대는 그리스나 스페인 또는 이집트의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의 젊은이들이다. 대학 졸업장이 없으며 당분간 대학졸업장을 가질 수 없는 젊은 세대이다.

대학 졸업자들이 커피가게의 바리스타나 점원으로 그들의 직장을 시작한다는 서글픈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럽거스대학교의 John J. Heldrich 노동력개발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졸업장이 없는 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John J. Heldrich 노동력개발센터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 전국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고교 졸업자들은 설문조사에서

가장 추적하기 어려운 집단이다(조사가 이루어진 후 두 달 후에 응답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전화번호 연결이 끊어져 더 이상 접촉할 수 없었다).

이들 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일이다.

“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주 위넷치(Wenatchee)에 거주하는 24살의 Walter Walden이 말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자 가운데서도 운이 좋았던 편으로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학교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는 지금 그의 어머니와 살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간호학 수업을 받고 있다.

Walden 씨보다 아래 연령층의 근로자들은 약화된 경제상황과 전통적인 중산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위협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고가 증가하기 전인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국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집단



의 37%만이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23%는 풀타임 일자리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의 고교 졸업자 가운데 16%만이 상근직으로 고용되었다. 22%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상근직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에 수반되는 부채의 부담에 대해 대학교육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 계속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고교 졸업자들은 대학 졸업장 없이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소매업 직장을 벗어나려면 대학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오리건주(Oregon) 메드퍼드(Medford)의 Children’s Place 의류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21살의 Bethany McClour가 말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이 어려운 이유는 어마어마한 부채 때문만은 아니다.

McClour 씨와 그녀의 남편 Andy는 3살이 채 되지 않은 두 딸이 있고 다음 달에 또 한 명의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다. McClour는 대학 교육을 받으려 했으나, 어린 자녀들의 존재가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주유소에서 일을 한다. 그는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며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학교는 한 시간 반가량 떨어져 있다. “어머니께서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McClour가 말했다.

다른 조사 응답자들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유로 비용과 가족부양 책임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절반이 넘는 56%의 응답자들은 그들 세대가 그들 부모에 비해 금전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4%의 응답자만이 그들의 부모보다 나은 삶을 예상했다. (Heldrich 센터가 최근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조사에서도 이번 조사와 비슷하게 부모세대와의 비교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수준을 따라잡는 것도 힘에 부친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 후, 18살의 Harley Sproud는 그의 아버지가 일했던 건설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달 후,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해고되었다. “버저킹에서 일하는 친구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라고 그는 말했다.

감자튀김을 튀기고 청소를 하는 일로는 그가 지난 가을 9주간 요리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할 수는 없었지만, 이 일은 그가 찾을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 그는 지금 교통사고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그는 그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다시 버저킹에서 일할 계획이다.

Sproud 씨와 같이 많은 고교 졸업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Heldrich 센터의 조사에 응답한 고교 졸업자들 가운데 56% 정도만이 수년 내에 그들의 경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역시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수년 내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못 미치는 수의 응답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수년 내에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나 집을 구매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조사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고교 졸업자였던 5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5%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 출처: 뉴욕타임스, 2012년 6월 6일자, 'More Young Americans Out of High School Are Also Out of Work'

미국 : 구직자 홍수, 그러나 기업체들은?

최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업률 발표 이후,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미국 기업체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러나 사업주들과 고용주들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체가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Express Employment Professionals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채용업체로 지난해 33만 5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주선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Robert Funk 씨는 많은 기업체들이 알맞은 사람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그의 회사는 18,000여 개의 일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일자리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가? 구직자들에게 빈자리로 남아 있는 일자리에 적합한 숙련기술이 없다는 점이 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전의 불황기 때보다 더 큰 간극으로 숙련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

고, 비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라고 Funk 씨는 말했다.

사례 : 뉴욕에 위치한 웹디자인 마케팅 회사인 Blue Fountain Media 사에는 10개의 빈 자리가 있다. 대표이사인 Gabriel Shaoolian 씨에 따르면 기술 백그라운드가 충분한 구직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프로 개발자나 웹 디자이너,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들은 일하려는 회사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수요가 있습니다.”

공석으로 남겨진 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의 회사는 Monster.com이나 Craigslist와 같은 온라인 구직 사이트들을 지난 2년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지원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다. “재양수준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LinkedIn 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는 나은 편이며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는 그들의 인맥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자들을 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적합한 지원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 지은 후, Shaoolian은 국외의 계약직 프리랜서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그리스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개발자들은 매우 뛰어나 그들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습니다.”

회사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IT 분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ManpowerGroup사의 조사에 따르면 IT 분야의 인력부족은 숙련 트레이드와 숙련기술 분야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인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나타났다. 판매직과 회계재무사무원, 운전수, 정비공과 간호사, 기계조작원 그리고 교사 등이 인력부족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10가지 직종에 포함되었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직종 가운데 상당수는 4년제 대학 교육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3자 물류 서비스 제공회사인 Coyote 물류회사의 대표이사 Jeff Silver 씨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는 30만개의 트럭운전수 일자리가 있다.

“트럭 운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트럭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마약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인 트럭운전수는 연간 3만5천 달러(한화 약 4,021만 원)에서 7만 달러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편한 직업은 아니지만요.”

미니애폴리스 교외에 위치한 Copeland 운수의 지역 매니저인 Charles Hoag 씨에 따르면 트럭운전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나이든 트럭 운전수들의 빈자리를 메꿀 젊은 운전수가 부족하

기 때문이다. “운전수를 채용하고 계속 붙잡아 두는 일이 계속적인 문젯거리입니다. 트럭 운전은 전통적인 블루칼라의 일이고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직종이죠.”

인력부족 문제는 운전자 보험과 관련되면 더욱 심각해진다. 보험회사들이 트럭운전수 보험을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운전수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회사는 운전수들에게 사내훈련을 실시할 여력이 있지만 소규모의 회사는 그러한 여력이 없다. 운전수 고용을 위해 Hoag 씨는 Craigslist와 미니애폴리스 리쿠르터를 이용한다. 그러나 리쿠르터도 사람을 찾는 데 고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운전수 부족으로 인해 그의 13대의 트럭 가운데 2대는 운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럭 리스비용을 매달 2,000달러(한화 약 230만 원)씩 지불해야 한다. “운전수 부족은 직접적으로 사업손실로 이어집니다.”

Drew Greenblatt 씨 또한 숙련기술자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손실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로봇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의 사업체 Marlin Steel Wire Products는 볼티모어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이버, 캐터필러, 도요타 등의 대기업에 고품질 판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로봇 기계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로봇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계들은 일주일에 70시간 정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Greenblatt 씨의 회사는 현재 다섯 명의 기계조작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 직종은 대학 졸업이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연봉은 6만 달러(한화 약 6,890만 원)에 이른다. 직종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것과 기계설계도를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이용할 줄 알 것이다. Greenblatt 씨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기 위해 고용지원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 직종은 꽤 괜찮은 중산층의 직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경기불황이고 우리는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STEM 기술(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을 갖춘 학교 졸업자들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Greenblatt 씨는 구직자들의 부족한 사회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제 사업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정확하게 잘 쓰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보잉(Boeing)이나 파이저(Pfizer)에 맞춤법조차 맞지 않은 이메일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당한 경력자 고용의 어려움을 깨달은 일부 기업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직원훈련의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신규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데 따르는 높은 비용과 훈련 이후의 이직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기업체들은 고용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테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회사 문화에 잘 맞는 직원을 채용하려 한다. 이러한 현

상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채용 과정에서 긴 시간이 걸린다.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성과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시됩니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SRC Holdings 대표이사 Jack Stack 씨가 말했다. 그의 회사는 2011년에 600여 명을 고용했고 2012년에도 400명을 더 고용할 계획이다. “기술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성이나 인간관계 등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회사에 피해를 주게 되지요.”

SRC 사가 빠르게 채용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Stack 씨는 SRC 사의 인사부문 디렉터인 Keith Boatright 씨에게 인성과 성정 평가를 채용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물류 전문가와 천연가스 발전 시스템 전문기술자 채용 시에 채용 지역을 스프링필드 지역 외로 확장할 것을 요구했다. “SRC 사는 이제껏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인사팀은 채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의 성장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 출처: 뉴욕타임스, 2012년 6월 27일자, ‘A Sea of Job-Seekers, but Some Companies Aren’t Getting Any Bites’



미국 : 일자리 불안이 대선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다가올 11월의 대통령 선거 때의 경제상황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가 지난 금요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상황은 수개월 전의 일자리가 증가하던 상황과 크게 다르다. 지난 6월에는 8만여 개의 일자리만이 창출되었으며, 실업률은 8.2% 수준에 머물렀다.

연초에는 올해 말 대선까지 실업률이 8%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다수였으며, 경제상황의 개선은 오바마 정부의 재집권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3월부터 고용 증가가 더뎠으며, 4월과 5월에는 고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상황의 악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회가 대선 전에는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제상황에 또 다시 맞닥뜨리게 되었다.

1,300만 명의 실업자 수를 줄이기에는 5월의 7만 7천 개와 6월의 8만여 개의 일자리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초의 고용 예상치를 조정해, 2012년 하반기의 부진한 일자리 성장을 전망했다.

“현재 경제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의 경기부양책이 경기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유럽위기에 따른 시장 축소와 개발국들의 더딘 성장은 현재 경제상황의 불안함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Conference Board의 거시경제

디렉터 Kathy Bostjancic 씨가 말했다.

노동부의 보고서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쳐 두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지난 금요일 오하이오주의 폴란드(Poland)에서 있었던 선거 유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15년간 벌어진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장기간에 걸친 결과임을 역설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롬니는 최근 일자리 증가의 약세가 오바마 정부에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했다.

그의 휴가지인 뉴햄프셔의 울프버러(Wolfboro)에서 롬니는 “우리 미국인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현재의 처절한 실패는 끝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대선이 미국인들이 지금 상황을 더 지속할지 아니면 끝낼지를 선택할 기회라고 말했다.

현재 일자리 성장의 약화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롬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에서 2월 사이에, 민간기업들은 매달 평균 25만 2천여 명의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3월에는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었다. 일단의 경제 전문가들은 12월에서 올해 2월 사이의 비정상적인 급격한 고용 증가는 건전한 경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난히 따뜻했던 지난 겨울의 날씨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igh Frequency Economics의 경제 전문가 Jim

O'Sullivan 씨는 “고용 전체로 보면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상황은 12월과 1, 2월과 같이 건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수 자체는 계절 조정을 거친다. 계절 조정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6월부터는 겨울 동안의 비정상적으로 급격한 고용 증가에 따른 고용 악화 효과가 감소해야 했다. 현재의 일자리 성장 둔화는 경제 전반의 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고 O'Sullivan 씨는 말했다.

과건근로사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주들이 경기회복의 지속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장기 고용에 투자하기를 꺼렸음을 나타낸다.

노동부 보고서 중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시간당 임금이 5월에 23.44달러에서 23.50달러로 증가한 것과 민간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34.4시간이 34.5시간으로 늘어난 점이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은 연방은행이 추가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다.

“QE3가 선거 전에 시행될 확률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Credit Suisse의 경제 분석가 Jay Feldman 씨가 말했다. QE3는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경기 부양책을 의미한다.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이제까지 경기부양에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경기부양책이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했는지 또한 의문이다. 따라서 연방준비은행은 통화량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기회복은 2009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몇

번의 희망적인 수준의 고용 증가가 있었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확실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

고용 둔화가 일어날 때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형 쓰나미와 아랍의 반정부시위 등 일시적인 충격에 그 원인을 돌렸다.

그와 같은 일시적인 충격을 견뎌내기에 미국 경제는 너무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현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용시장 상황 개선만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무디스사의 애널리스트 Sophia Koropeckyj 씨가 말했다.

미국 내이나 해외에서 추가적인 경기변동이 있다면 고용 성장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지난 1/4분기에 기업의 수익은 감소했다고 미 상무부가 발표했다. 수익 감소의 주 원인은 해외에서의 수익 감소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을 포함한 개발국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의 지속적인 국가부채 위기는 미국 경제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과 금융시장, 국가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유럽의 위기는 미국 성장률을 1% 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 분석가 Andrew Tilton 씨가 미국의 GDP에 유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말했다.

미국 내 문제점 또한 산적해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근로자 해고가 주춤하였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 또 많



은 해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 말에는 부시 정부의 세금 감소와 오바마 정부의 일시적인 근로소득세 인하가 효력을 다함에 따라 연방세의 증가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 규모의 정부 지출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재정지출의 감소에 따른 충격 외에도, 실업급여의 연장 또한 올해 말에 끝이 난다. 국가 고용법에 따르면 새로이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26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한의 축소로 인해 실업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소비

의 감소는 고용주들의 고용 유인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기업체들이 정부 정책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기업들의 장기적인 고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고용을 최대한 축소하려 할 것이다”라고 무디스사의 애널리스트 Koropeckyj 씨가 말했다.

• 출처: 뉴욕타임스, 2012년 7월 7일자, ‘Job Weakness Starts to Shape Election Tone’

미국 : 실업수당 수급 신청, 4년 만에 최저 기록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가 지난 주 급감했다. 그 주된 원인은 일부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여름철 가동중단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동차 생산근로자들에 대한 일시적 해고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월에는 신차와 트럭 판매가 늘었고 자동차 산업의 부흥기류가 지속되었다. 또한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독립기념일 판촉활동을 일찍부터 시작하였는데, 이에 당월 말 판매량이 늘어났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는 26,000명이 감소하여 계절적 영향을 고려한 결과 3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지난 목요일 노동부가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2008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변동

폭을 줄여주는) 4주 평균값은 37만 6,500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하향세는 몇 주 안으로 반전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크레딧 스위스의 경제학자 질 브라운 씨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문서를 통해, 자동차 공장가동 중단이 “심한 변동 폭을 야기하곤 하기 때문에 7월 수치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통상 신모델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7월 첫째, 둘째 주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종업원들은 이 기간에 실업수당을 신청하곤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포드 자동차는 어느 때는 2주였던 가동 중단을 1주로 줄인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에 크라이슬러는 올해 가동 중

단을 생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실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령 신청자가 계속 37만 5,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실업률을 줄일 정도로 고용이 활발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4월 이후 신청 건수는 대체로 37만 5,000명 언저리에서 변동하였다.

그러나 올해 1~3월에 비하면 고용량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고용주들은 6월에 단 8만 명만을 추가 고용했을 뿐인데, 지난 세 달 연속으로 고용량은 저조하였다. 그리고 실업률은 8.2%로 유지되었다.

고용 증가는 4~6월 분기 동안 월평균 75,000명에 그쳤다. 이는 1/4분기 월평균 22만 6,000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난 화요일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4월 급락을 경험한 후 5월에는 구인광고를 늘렸다. 이는 일자리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고통스러운 고실업 상태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

들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임금은 물가 인상을 가까스로 따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소비를 유보하고 있다.

소비지출은 성장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고용을 충분히 촉진할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 올해 1~3월에는 연성장률이 1.9% 정도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4~6월 분기 동안 성장이 개선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경제전망을 더 하향조정하였다. 현재 2012년 성장률을 1.9%에서 2.4% 사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4월 예측치보다 0.5% 더 낮은 수치이다. 연준은 또한 올해 실업률이 더 이상 감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 출처: Associated Press, 2012년 7월 12일자, 'US jobless claims plunge to lowest in 4 years'

미국 : 7월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지표는 경기회복의 기미 안 보여

7월에는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수개월 만의 일자리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 수준은 여전히 실업자 수 감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부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16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7월의 일자리 증가는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의 일자

리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 공화당에게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공화당의 비난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더딘 것이라고 공화당을 비판했다.



7월의 실업률은 전달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연평균 실업률 수준인 8.3%를 기록했다. 풀타임 일자리를 찾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실망실업자들을 실업에 포함할 경우 실업률 수준은 15% 수준으로 올라간다.

미국 증시는 고용 수준 개선 소식에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 리포트는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는 못했다. 또한 고용 성장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Capital Economics의 북미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Paul Ashworth 씨는 “지난 수개월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수치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초의 고용 회복 예상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올해 하반기 고용은 7월의 일자리 증가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만족스럽지 않은 7월의 고용 통계와 관련하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은행이 9월 정기회의까지는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주의 공식발표에서 연방준비은행은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투자유보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산매입과 이자율 정책에 대한 공시 연장이 이루어질 것이 유력하게 전망된다.

8월의 일자리 데이터에 따라 연방준비은행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연준의 경기회복을 위한 시장개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많은 돈이 시중에 흘러 들어간 시점에서 새로운 금융화폐정책의 시행이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이다.

Ashworth 씨는 “이제 가용할 만한 화폐정책이 남아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와 그 대척점에 있는 공화당은 각자의 입장에서 금번의 일자리 보고서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임을 주장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미트 롬니(Mitt Romney)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이에 대해 언급했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실패 그 자체이다.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서의 한 모임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1,200만 명의 근로자들을 대신해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이제까지 의회의 방해로 인해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번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직종과 공교육 직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있었다. 건설업과 공교육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 법안이 중점을 두는 주요 직종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지방 정부의 교사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법안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Alan B. Krueger가 말했다.

의회는 현재 소강 상태이며 11월의 대선 전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등의 활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증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 금

웅위기와 연말에 있을 미국 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기업체들은 고용 결정을 정치 상황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로 미루고 있다. “기업의 수익은 지난 6개월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은 현재의 불안한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는 현금보유를 놓지 않을 것이다.” Credit Suisse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Neal Soss 씨가 말했다.

공공부문은 지난 2년간 매달 지속적으로 해고를 해왔으며 이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증가를 잠식해왔다. 7월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에서는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금번 3사분기의 국내총생산 예상치는 제조업과

소비자 지출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증가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지난 2007년 12월에 시작된 불황 이후 현재 미국 경제는 더 많은 물자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5백만 개가 감소했다.

2009년 10월 이후에 이루어진 실업 감소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성인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메릴랜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Peter Morici는 밝혔다.

- 출처: 뉴욕타임스, 2012년 8월 3일자, ‘Hiring Picks Up in July, but Data Gives No Clear Signal’



유럽

독일 : 정부, 미니잡 개혁안 두고 부처 간 논란

독일의 저임금 경미고용을 뜻하는 미니잡의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 내 부처들 간에 이견이 도드라져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 연방 가족부는 미니잡의 소득 상한선을 변경하는 노동사회부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사회부의 의견은 내년부터 미니잡의 월 수령액 상한선을 현행 400유로(한화 약 57만 원)에서 450유로(한화 약 64만 원)로 인상하자는 쪽이다. 이에 대해 가족부 측은 그것이 “노동시장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고용평등 차원에서도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경미고용의 수행자들의 노령빈곤의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니잡 수행자들이 새로운 소득가능성으로 인해 정규 일자리로의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도된 자극제”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

이다.

현재 이 법률안은 가결될 것이며, 여름휴가 이후 연방하원의회로 회부될 계획이다. 노동사회부 측의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 일각에서 소득의 상한선을 늘리려는 희망이 있다고 밝히며, “우리는 정책 입안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니잡 수행자들의 소득의 상한선을 늘리는 것은 이미 현재의 보수연정의 출범 당시 CDU와 FDP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바 있다. 두 정당 모두 2012년 초에 2013년부터 50유로를 인상시킨다는 방안에 합의했었다.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폰 더 라인 노동사회부장은 일찍부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출처: Berliner Morgenpost, 2012년 7월 26일자, 'Regierung streitet über eigenes Minijob-Gesetz'

스웨덴 : 정부, 새로운 노동시장 프로그램 “노동패키지(jobbpaket)” 개시 선언

매년 7월 초 스웨덴은 거의 모든 관공서 및 회사의 휴가로 인해 매우 한적하다. 대신 발틱해에 위치한 고틀란드섬의 비스비시 알메달렌은 정당, 각종 이익단체 및 회사의 대표들과 행사를 보고하는 저널리스트

들로 북적인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 토론을 하는 것이다. 소위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의 한 가지 중요한 행사는 매일 저녁 7시에 각 정당

의 대표가 돌아가면서 미래 정치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이다. 7월 3일 저녁에는 온 건당 출신의 현 스웨덴 수상이 연설을 하였는데, 이때 발표된 중요한 정치프로그램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인 “노동패키지(Jobbpaket)”였다.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열린 온건당 정치세미나의 토론도 이 프로그램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차기 총선을 2년 앞두고 집권 여당은 야당 및 노동시장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을 개혁하려는 것이다. “노동패키지”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직업소개(Yrkesintroduktion)”인데 이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 시 노동과 교육을 병행하고 이럴 경우 청년들의 초기 임금을 노동시장의 보통 초기 임금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하려는 것이다. 온건당 소속 재무장관 안테르스 보리는 ‘직업소개’ 제도는 이미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 도입된 것이며, 이들 국가가 저임금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스웨덴에도 이미 도입된 상황인데 아직도 많은 수의 회사가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리 장관은 앞으로 정부, 야당 그리고 노동시장의 파트너가 더욱 열심히 토론해 스웨덴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조속히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야당도 동의해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강조했다.

• 출처: Svenska Dagbladet, 2012년 7월 5일자,
‘Borg duckar om tidsplan för jobbpakt’

스웨덴 : 국영직업알선소, 몰도바공화국과 개발협력 사업 진행

스웨덴의 국영직업알선소는 2001년 이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자리한 동유럽의 내륙국인 몰도바공화국과 세 차례에 걸친 노동시장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다. 그중 두 가지 협력사업은 스웨덴의 해외개발공사(Sida)가 자금을 지원해 이루어졌고, 나머지 하나의 협력사업은 유럽연합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진행되었다.

지난 2012년 6월 31일에 유럽연합위원회는 새로운 협력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연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이런 종류의 협력사업을 연장하는 것은 드문 일에 속하는데, 국영직업알선소의 국제부 담당관은 이것이 스웨덴의 국영직업알선소가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이는 또한 몰도바공화국의 사회, 노동제도 건설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몰도바의 사회, 노동제도가 잘 정비되면 유럽연합에도 유익한 일이다. 몰도바공화국이 유럽연합 가입을 공식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노동시장 협력사업은 전부 유럽연합이 지원하는데 자금 규모는 2백만 유로(한화 약 29억 원)에 달한다. 스웨덴의 국영직업알선소는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또 각종 노동사업의 실행과 조정을 담당한다. 특히 이번 협력사업의 목적은 몰도바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노동 교류 증진에 있다.

유럽연합과 몰도바공화국 간의 파트너십 계약은 2008년 6월에 맺어졌다. 이 파트너십 계약에는 스웨덴을 비롯한 15개국의 유럽연합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동시장 이동과 이민과 관련한 각 분야에서 약 80여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와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유럽국가들의 지원 형태는 무척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 국경수비 제도 개선, 간소화된 세관검사제도 및 부모들의 외국으로 노동이민을 간 아이들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문제가 포함된다.

• 출처: 국영직업알선소(Arbeitsförmedlingen), 2012년 7월 6일자, 'Arbetsförmedlingen leder utvecklingsarbete i Moldavien'

영국 : 아동빈곤 퇴치, 2020년까지 목표 달성 어려울 듯

영국 정부가 목표로 한 2020년까지의 아동빈곤(child poverty) 퇴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의 고문이 말했다. 전 장관이었던 앨런 밀번은 그룹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무자들이 애초 노동당 정부가 도입하였던 취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하며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영국의 하원의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로 190억 파운드(한화 약 34조 원)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은 최근 30년간 빈곤층 어린이의 수가 가장 적었지만, 2010년까지 아동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목표를 이루는데에는 실패하였다.

영국 정부는 빈곤층 어린이를 가정 소득의 중간값(median)의 60% 이하인 가정의 어린이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간값은 평균과는 다른 개념으로 전체 소

득분포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를 의미한다. 노동당 정부는 1999년에 아동빈곤 퇴치를 2020년까지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0년에도 계속 노력하였다. 연합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목표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 정부 밑에서 보건부 장관을 지낸 밀번은 현 추세로 가면 빨라도 2027년이 되어서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역사에 남은 정도로 획기적인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종전의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하였다.

영국 내에서 빈곤가정에 사는 어린이의 수는 2010~2011년에 230만 명으로 추산되어 현재 약 30만 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이는 2010년의 목표치인 90만 명보다 60만 명 정도가 못 미치기는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빈곤층 어린이의 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가구당 소득의 중간값(median)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현재 빈곤층의 측정 척도인 소득의 중간값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주당 419파운드(한화 약 75만원)였다. 이는 전해에 비해서 13파운드 줄어든 수치이다. 밀번은 부총리인 닉 클레그의 자문위원이었는데 최근에는 아동빈곤이사회(commission)의 의장도 겸하고 있다.

그는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축소된 공공지출이 아동빈곤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극심한 빈곤층인 5세 이하의 80만 명의 어린이에 대해 교육 투자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는 빈곤문제는 단순히 소득의 측면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실업, 가정의 붕괴 혹은 약물 중독과 같은 사회적 손실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현 노동 연금부 장관인 레인 던컨 스미스는 노동당의 빈곤층 퇴치 전략은 이미 실패하였다며, 정부는 최근에 부모 중 한 명이 일주일에 최저임금으로 3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세금과 각종 수당을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으로 통합 중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BBC NEWS, 2012년 7월 12일자, 'Poverty target will not be met by 2020, says Milburn'

영국 : 런던올림픽과 아웃소싱

최근 런던올림픽 보안을 맡은 민간기업 'G4S'가 올림픽 개막 이전까지 투입하기로 한 1만 3,700명의 보안인력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영국 정부가 일부 군인들을 올림픽 보안업무에 배치기로 했다. 따라서 런던을 찾은 관광객들은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 의해 무장된 올림픽을 보게 될 것이다. 군인들이 보안업무를 하는 것과 시간당 2.60파운드(한화 약 4,700원)를 받는 견습생 신분의 보안요원들이 그 업무를 맡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쁜지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올림픽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에 좋은 방법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일선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이후 2012년 현재까지 경찰 업무 인력 1만 7,6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2015년까지 그 수는 3만 2,400명에 달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아웃소싱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즉 어느 정도 팬츠는 임금과 경력 경로 등을 보장받는 풀타임 일자리가 임시직 고용, 때론 최저임금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근로자들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적절한 보상은 해외업무위탁과 조세 피난처 등을 통해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중



요한 것은 아웃소싱의 선순환 고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실패 사례를 계속 목격하고 있다. 병원에서 청소근로자들을 아웃소싱함으로써 감염이 늘고 항생제로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이 증가했다. 공공서비스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킨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가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는지는 지금도 여실히 드러나는 스캔들이

기도 하다.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간 남런던NHS 병원이다. 앞으로 철도, 런던 지하철, 콜센터 등 희생자 대열에 오를 리스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 출처: 뉴스테이트먼 온라인, 2012년 7월 12일자, 'G4S is just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outsourcing disasters'

영국 : 국경청, 지나친 인력 감축으로 몸살

영국 국경청(UK Border Agency)이 예정됐던 것보다 1천 명이나 많은 인력을 해고한 결과, 현재 추가 인력을 모집하고 있고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BC와 인디펜던트 등의 영국 언론은 7월 17일, 정부 예산지출 감시기구인 와치독(Whitehall's spending watchdog)의 보고서를 인용, 국경청이 계획된 것보다 많은 인원을 너무도 신속히 해고한 결과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아직 출입국관리소의 자동화시스템 도입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국경청이 인력삭감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 지난해 4월 현재 영국 국경청에는 총 2만 2,580명이 고용돼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올 4월 현재 그 수는 2만 469명으로 줄었다. 이는 1년 새 전체 재직자의 10%에 가까운 2,100여 명의 인력이 감축됐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출입국관리소 업무의 자동화 속도가 예정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국경지역의 노동력 현대화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음에도 2011, 2012년 회계연도에 국경청 인력이 계획했던 것보다 1천 명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특히 런던과 남동부 지역 국경청은 인력부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력이 조직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2010년과 2012년 사이, 조기퇴직에 따른 비용은 6천만 파운드(한화 약 1,078억 원)에 이른다고 와치독은 밝혔다.

감사원은 3억 8,500만 파운드(한화 약 6,918억 원)를 들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을 줄일 목표로 도입한 출입국관리 자동화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획된 것보다 적은 규모의 서비스만 제공 가능한 이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 지난 3월 말 현재 이미 예정됐던 2억 2,400만 파운드(한화 약 4,025억 원)의 예산을 초과해 2,800만 파운

드(한화 약 503억 원)가 추가로 집행되었다. 따라서 이 시스템 도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던 예산감소분은 1억 600만 파운드(한화 약 1,905억 원)로 더 낮춰졌다.

와치독은 자동화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더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업무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점 상실, 부실한 관리는 물론 계획과 집행, 보고 등에서 지나치게 낙관주의에 입각한 경향성이 지금의 문제점들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예비내각의 이민 담당 장관인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이 같은 대규모 인력감축과 계속되는 예산삭감 때문에, 국경을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추가 지원인력이 히드로 공항이나 스탠스테드공항에 배치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교통 및 생활비용, 지역 호텔 같은 잘 곳 제공 등에 추가비용

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내무장관은 이러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또한 국경청과 국경수비대가 이미 한계상황에 있는데도 왜 인력을 계속 감축하려 하는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국경청과 국경수비대 역할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와 관련, 어떠한 오해와 착각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납세자들이 낸 엄청난 규모의 돈을 절감했고, 사업모델을 재정비했으며, 업무의 핵심 영역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반박했다.

- 출처: 1. 일간 인디펜던트 온라인, 2012년 7월 17일자, ‘Border Agency ‘cut too many staff’ watchdog claims’
- 2. BBC 온라인, 2012년 7월 17일자, ‘Border staff ‘being cut too fast’

영국 : 청년 구직을 위해 정부가 회사들에 보수 지불키로

현재 정부는 회사가 10대 청소년들을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부총리인 닉 클레그의 1억 2,600만 파운드(한화 약 2,297억 원) 규모의 ‘청년계약(Youth contract)’은 영국의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 불리는 직업이 없는 16~17세 젊은이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회사들이 그 계획을 잘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을 인력으로 공급하길 바

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인력개발 그룹인 Pertemps는 정부에서 청년계약을 수여받은 훈련기관이다. 이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인 폴 킹은 안정적인 가족이 없고 학교를 그만둔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누군가 돌봐주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한다고 말하였다. 이 회사의 멘토들은 젊은이들과 개인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을 면접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젊은이들이 해고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각각이고, 기존에 각각으로 해고된 경험이 있는 이들이 니트족보다 더 출근시간을 잘 지키고 하였다.

55,000명의 니트족이 학교나 직장으로 복귀하는 성과에 따라서 선정된 자선단체와 회사들은 보수를 받을 것이다. 요크셔에 있는 한 회사는 전직 군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세션을 가질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그들이 도운 젊은이 한 명당 2,200파운드(한화 약 400만 원)를 받지만 총보수는 그 젊은이들이 완전히 정착하여 풀타임(full-time)으로 직장 혹은 학교에 돌아가거나 6개월가량 일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닉 클레그 부총리는 가장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이 안을 실행할 수 있는 회사들을 골랐다고 말하였다. 16세에서 24세의 젊은이 중 다섯 명 중 한 명이 니트족으로 분류가 되는데 최근 이 수는 116만

3,000명에 달한다. 이 3년짜리 프로그램은 중등 교육 시험인 GCSE에서 C 이하의 성적을 받은 16~17세의 니트족을 대상으로 한다.

클레그 부총리의 계획은 최초로 도입되었을 당시 노동당의 큰 비판을 받았는데 노동연금부의 장관인 리암 번은 이 계획이 대다수의 젊은 무직자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동당은 이 계획을 “너무 작고 너무 늦은” 계획이라고 비난하며, 노조들은 다른 영역에서의 재정 축소로도 이 계획을 위한 자금이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Nasw’ 교사노조 위원장인 크리스 키츠는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제도를 망가뜨린 책임과 니트족의 증가에 대한 책임이 클레그 부총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BBC news, 2012년 7월 20일자, ‘Nick Clegg scheme will pay firm to wake jobless teens’

영국 : 올림픽 고용정책 실망스러운 결과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의 2012년 런던올림픽을 이끈 리더로서 성공을 거둔 것과 반대로 핵심 고용정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2년 전인 2010년, 보리스 존슨 시장은 런던의 높은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올림픽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정책(top priority)’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구직 상담, 기술훈련 기회 제공 등

의 사업에 2천만 파운드(한화 약 366억 원)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고용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아 보인다. 올림픽 일자리 프로젝트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시기적으로 계획보다 지연됐고, 예산 또한 계획보다 줄었으며,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치를 설정한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시장에 의해 착수된 고용촉진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12 고용특별프

로젝트로, 총 450만 파운드(한화 약 82억 원)를 들여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 런던 전역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런던 내 올림픽 경기가 유지되는 6개 자치구 고용프로젝트이다. 뉴엄, 타워 햄릿즈, 해크니, 그리니치 등 6개 자치구의 실업률은 영국 내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총 1,500만 파운드(한화 약 27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장기실업자들의 일자리 찾기에 중점을 뒀다.

2012프로젝트는 총 1,400명에게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최소한 1년 동안 그 일자리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0년 4월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실제 사업이 집행된 것은 지난 가을의 일이다. 책정된 예산을 올림픽에 완전히 출자할 기회를 상실한 셈이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채용을 완료했거나 채용계획을 세운 후였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고용성과'라는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불투명해졌다. 다른 프로젝트의 경험에서 보건데 '조속한 개입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교훈을 실제에 적용시키지 못했다. 얼마나 이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업에 150만 파운드(한화 약 27억 원)를 집행키로 했는데, 이는 다시 57만 파운드(한화 약 10억 원)로 재조정되었다. 그럼에도 실제로 집행된 돈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뼈격거린 것으로 보인다. 접근하기 곤란한 목표 그룹, 결과(성과)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모델 등이 핵심 걸림돌로 꼽혔다.

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인 시텍

(Seetec)은 취업을 성사시킨 사람 수만큼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의 가장 큰 부분(40%)은 취업한 근로자가 해당 일자리에 1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오래 한 곳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올림픽 관련 일자리 또한 단기 일자리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반면, 이는 그 목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어렵다는 역효과 또한 갖고 있다. 계속되는 고실업 상황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미래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비슷한 문제가 - 정도는 조금 약하지만 - 런던 자치구 프로젝트에서도 나타난다.

5천 명을 취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 프로젝트 역시 성과는 목표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람들을 일자리에 6개월 이상 머물게 하는 것이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을 증명했다. 지난해에 지출하기로 예정돼 있던 500만 파운드(한화 약 92억 원) 중 350만 파운드(한화 약 64억 원)만 집행됐다.

불경기 동안 투자의 긴박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책정된 총 1,500만 파운드 예산 가운데 200만 파운드가 이미 삭감됐다. 덧붙여 이 프로젝트가 담당해야 할 영역은 바킹앤대거넘 자치구로까지 확장됐다. 이 지역의 1년 성과를 보면, 130명이 이 프로젝트에 등록을 했고, 이 가운데 38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오직 12명만이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12개월 이후라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케 한다.



조기에 발견된 문제들 때문에 지역자치구들은 시장이 정한 목표치의 완화와 수수료 지급방식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이들을 일자리에 머물게 할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또한 해당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해당 목표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런던시 대변인은 2012 프로젝트로 300명이, 런던 자치구별 프로젝트로 3,600명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올 가을에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BBC 온라인, 2012년 8월 9일자, 'London 2012: Olympics jobs legacy 'falls short''

프랑스 : 노사정 사회적 회담 개최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모인 대규모 사회 컨퍼런스(Conférence sociale)가 지난 9일과 10일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는 고용, 임금, 기업 경쟁력, 사회복지기금 개혁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사정 회담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예고된 것이었다. 물론 이번 회담의 목적은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모색하고 발표하는 것이 아닌,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교섭에

서 다룰 현안들을 점검하고 윤곽을 그리는 데 있다.

먼저 고용분야에서 노사는 '해고납용 문제'와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임금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에 관한 합의'*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팡(Sapin) 노동부 장관은 회담 직후 '이 합의를 이용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직원 10명 이상이 거부할 경우, '고용보장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오는 9월부터 착수하게 될 '미

* Accords compétitivité-emploi : 올해 1월 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제안하고,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이 조항은 기업이 직원들과의 합의하에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기업별, 지부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단체협상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전국 단위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협약은 프랑스 임금 생활자의 95% 정도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이 조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회당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 Plan de sauvegarde de l'emploi(PSE) : 언론에서 주로 '사회적 계획'으로 불리는 고용보호계획은 노동법(Code de travail, Article L321-4-1)에 명시된 대량해고방지 프로그램이다. 50인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이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해고를 피하거나 그 수를 줄여야 하며, 불가피한 해고대상자들의 재취업을 도와야 한다.

래의 일자리'*** 사업을 위해 8월부터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부분실업과 해고문제 역시 세 주체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사용자들의 보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재정경제부 모스코비치(Moscovici) 장관은 오는 9월 사기업 조직에 관한 법률을 고안할 것이며, 여기에는 사장의 보수를 통제하고 임금위원회에 직원 대표의 참석에 대한 부분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 역시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CFDT 세레크(Chérèque) 위원장은 '국가가 경영자의 월급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CGT 위원장인 티보(Thibault) 역시 '정부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최저임금 결정은 오는 9월부터 전국단체협상위원회 차원에서 성장과 관련하여 지수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9월 21일부터는 직업의 평등에 관한 교섭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교섭에서는 부분노동, 특히 여성들의 시간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연금, 병가 보상금 등)이 논의된다.

- 출처: Le Monde 인터넷, 2012년 7월 10일자, 'Emploi, rémunérations... ce qui s'est décidé à la conférence sociale'

*** 새 정부의 공약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주로 교외 지역, 저소득층 저학력 청년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 푸조 그룹(PSA), 일자리 8천 개 감축 계획 발표

지난 7월 3일 한 노동조합 간부가 예상한 것처럼, PSA 그룹은 7월 12일 약 8천여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예외적으로 열린 기업중앙운영위원회(Comité central d'entreprise)에서 이 그룹은, 3천여 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올네수보아(Aulnay sous bois) 지방 공장에서의 생산을 2014년을 끝으로 중단할 것이며, 관리직, 연구개발직, 영업직 등에서 희망퇴직을 통해 3,6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예고했

다. 또한 렌(Rennes) 지방 공장에서도 1,400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PSA 그룹은 자동차 회사로는 업계 1위의 기업으로, 프랑스 내에서 약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 중 8만 명은 자동차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만 9천여 명이 이 그룹에서 일하고 있다. 즉 프랑스 내 PSA 그룹 자동차 부문 일자리 중 약 10%가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6,500



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잃고, 1,500여 명은 전환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내 공장의 폐쇄로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렌 지방 공장 5,600개의 일자리 중 1,400개가 없어진다. 비생산부문 축소 대상인 3,600개의 일자리는 연구개발 분야 1,407개, 산업관리 분야에서 1,325개, 상표관리 분야 중 570개, 그 외 28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발표는 노동계와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내 제1 노동조합인 CGT는 “PSA의 방침은 근로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일자리 지키기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올랑드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이로(Ayrault) 국무총리, 몽트부르(Montebourg) 생산재건장관(Le ministre du redressement productif, 산업경제부를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개명)은 일제히 충격과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인 개입과 지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몽트부르 장관은 “이번 계획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사기업에 할 수 있는 모든 압력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코페(Copé) 총재

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절대적인 우선 과제는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으며, 같은 당 자콥(Jacob) 원내총무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 계획을 요구하며, 동시에 “정부가 사회적 부가가치세* 폐지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PSA의 감축 계획은 수많은 하청업체에서의 감원을 예상케 하고 있다. 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올내 공장 직원 3,300명 중 300여 명이 파견직이며,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9천여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즉, 8천여 명을 감원했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프랑스 전체에서 3배 혹은 4배의 해고를 예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1,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헨느(Rennes) 지역은 “약 1만 7천여 명이 PSA에 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자동차 계열사 한 전문가가 밝혔다.

- 출처: 1. Le Monde, 2012년 7월 12일자 인터넷, ‘PSA sacrifie Aulnay et va supprimer 8, 000 postes en France’
- 2. Le Monde, 2012년 7월 12일자 인터넷, ‘Les sous-traitants de PSA en première ligne’

* TVA social 혹은 TVA anti-délocalisation (공장 이전 방지를 위한 부가가치세) 등으로 불리는 조세제도는 올해 초 사르코지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사회당에서는 줄곧 반대해 왔다. 이 제도는 가세가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늘림(19.6%에서 21.2%)으로써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 부담금을 줄이고, 그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폐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

일본 : 출산 여성의 취업상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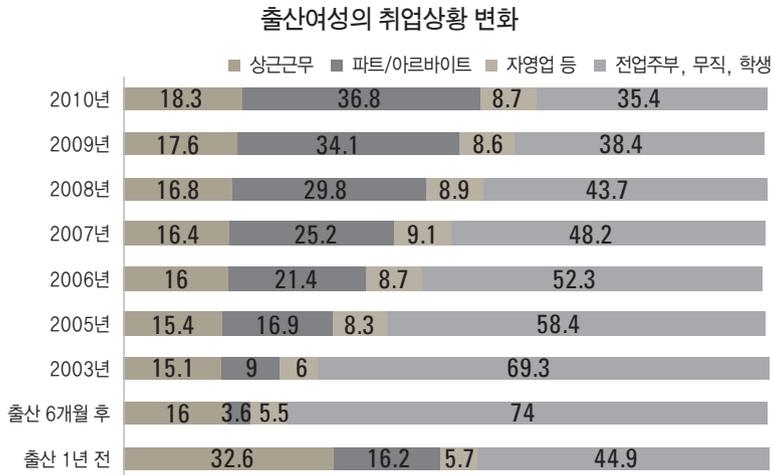
후생노동성은 7월 6일 「일하는 여성의 실정」(‘여성노동백서’라고도 불린다)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출산한 여성의 취업상황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의 취업상황을 2001년부터 실시한 패널 조사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출산 1년 전의 경우 예비엄마의 32.6%가 상근근로자였고, 16.2%는 파트/아르바이트, 5.7%는 자영업 등, 그리고 44.9%가 전업주부, 무직, 학생이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취업상황을 보면, 상근근무 16%, 파트/아르바이트 3.6%, 자영업 등 5.5%, 전업주부, 무직, 학생 74%였다. 즉, 상근근로자의 약 1/2, 파트/아르바이트의 22.2%만이 근무하

고 나머지는 전업주부가 된 것이다. 자영업 등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상근근로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파트/아르바이트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자영업 등도 출산 후 4~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약간 감소하고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 여성은 출산하기 전 상근근로자이면 출산을 계기로 약 1/2이 퇴직을 하고, 파트/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을 계기로 약 80%가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자녀의 성장과 함께 크게 증가하는 고용형태는 파트/아르바이트이다.

2001년 출산한 일본 여성의 취업상황 변화를 간략





히 말하면, 약 45%가 출산 전 전업주부, 무직, 학생이었고 비정규직의 경우 약 80%가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였으며, 출산 후 자녀의 성장과 함께 파트/아르

바이트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후생노동성(2010), 「21세기 출생아 종단조사」.

일본 : 청년층 고용전략 결정, 일본적 고용관행에 대한 변경은 포함 안 돼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12일 청년층의 취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층 고용전략’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청년층 고용전략’은 기업과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 및 조기기직 방지와 관련된 대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 ‘청년층 고용전략’에는 신규 졸업자 중심의 채용과 근로자의 해고를 규제하고 있는 일본적 고용관행을 변경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층 고용전략’에서는 중소기업의 채용 의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기업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해 발생하는 고용의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안으로 지역 노사와 대학이 연계한 중소기업에서의 취

업체험(인턴십) 확대, 대학과 헬로워크의 연계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일생명경제연구소 니이즈카 씨는 “중고령자를 해고할 수 없는 만큼 경기침체에 의한 노동력 조정의 여파는 신규 졸업자 채용 억제라는 형태로 청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도채용을 늘리고 해고 규제를 수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조간 5페이지, 2012년 6월 13일자, ‘慣行変革、踏み込まず、若者雇用戦略を政府決定’

일본 : 스마트폰 경제효과 7.2조 엔, 33만 명 고용창출

가와바타 다쓰오 총무대신이 ITC(정보통신기술)의 현상과 과제를 정리하여 내각회의에 제출한

2012년판 「정보통신백서」가 17일 승인되었다. 백서는 스마트폰(고기능 휴대전화)과, 태블릿형 단말기

의 보급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7조 2천억 엔(한화 약 106조 원)에 달하며, 33만 8천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계하였다.

또한 백서는 스마트폰 시장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2.7배 확대되었으며, 광고와 단말기 시장의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통신회사에 지불하는 이용료 1조 2,180억 엔(한화 약 18조 원)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통신판매) 1조 31억 엔(한화 약 15조 원)을 포함해 총 3조 6,567억 엔(한화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폰 관련 매출이 증가하는 것에 의해 원재료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간접효과도 직접효과와 같은 규모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총액 7조 2천억 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백서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에게 ICT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가와바타 총무대신은 “지진에 대한 재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게 ICT의 이용 및 활용은 성장의 엔진임에 틀림없다”고 언급하였다.

- 출처: 산케이신문 도쿄 조간 11페이지, 2012년 7월 18일자, ‘스마ホ 經濟効果7.2兆円 33万人の雇用創出’

중국 : 2012년 실업보험 가입자, 전국적으로 약 1억 4천만 명

5월 29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2011년 말 전국 실업보험 가입자 수가 1억 4천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년도에 비해 94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심시우루(星透露) 차관은 2011년 한 해 실업보험의 기금 수입은 923억 위안(한화 약 17조 5,287억 원), 실업보험의 기금 지출은 433억 위안(한화 약 8조 2,231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41.9%와 2%가 증가한 수치이다. 기금 잔고는 해마다 증가했으며, 기금 리스크 방지 능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2011년 전국적으로 매월 1인당 평균 실업보험 급여는 614위안(한화 약 12만 원)에 이르렀으며, 전년도에 비해 24%가

증가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심시우루 차관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속도가 가속화되고 산업구조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주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의 문제가 불가피해졌고, 인구대국인 중국의 기본적인 상황하에서 취업의 압박과 구조적 모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2차 5개년계획 시기 동안 취업형태가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실업보험조례를 수정하고, 실업보험의 기금 지출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정적으로 실업의 동태적 관리 및 측정과 실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



세계노동소식

시에 낙후되거나 합병 구조조정된 기업의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실업보험의 각종 관리사업을 개선하고자 한다.

• 출처: 新华网, 2012년 5월 30일자, '全国参加失业保险人数达1.4亿'